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2024. 12. 26.(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CONTENTS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김은경 전 혁신연구단 단장	6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8
좌장	박석균 대표(교육언론 창)	
발제1	민주주의 위기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	11
	서복경 박사(더가능연구소 대표)	
발제2	더불어민주당 당원 역량 강화 방안	37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토론	당원 주권 강화 방안	
	이연희 국회의원	47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1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57
	당원 역량 강화 방안	
	홍수지 서울시 동작구 활동가	61
	김의겸 경기도 파주시 활동가	69
	오종룡 경기도 용인시 활동가	77
	도민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전략기획실장	83

축 사



이 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당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평화적 정권 교체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화 운동부터 촛불 혁명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곧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들이었습니다. 12.3 내란사태에도 광장에 모여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지향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당원이 자발적으로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당권은 당원에게 있습니다. 당원 주권이 강화되며 권리당원도 크게 증가 했습니다. 140만이 넘는 권리당원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오늘 토론회가 140만 권리당원의 시대, 당원의 주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모여 우리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당원 중심 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진정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축 사



김은경 전 혁신연구단 단장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연구원 혁신연구단 단장으로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이끌었던 전(前)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의 미래를 논하고, 더 나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민주당의 혁신과 도약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창당 이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원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비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될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는 단순히 내부 시스템 개선을 넘어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당원 주권은 당원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원이 단순히 지지자나 서포터의 역할을 넘어서, 정당 운영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역량 강화는 당원 개인의 성장과 함께 정당의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정책 교육, 소통 채널 확대, 당원 참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당원들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뿌리로서 국민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금의 시대적 과제와 민주당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포용과 통합,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당원들이 정책 개발과 소통, 선거 캠페인 등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활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들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역시 민주당의 거듭되는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주당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그리고 당원과 함께 더 큰 정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전 혁신연구단 단장 김은경

인사말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250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거대 정당으로 전 세계 민주 정당들 가운데 당원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고 밝힌 바와 같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정당에게는 끊임없는 혁신만이 조직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 없는 정당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자칫하면 퇴행적 정치와 국정 운영으로 국가와 국민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원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혁신이 중요합니다. 대중정당에게는 끊임없는 혁신은 생존으로서의 수단, 집권의 수단을 넘어 국가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혁신연구단을 구성하여 ‘당원 권한 강화’, ‘당원 역량 강화’, ‘정책 정당 구축’ 등 세 연구 분과로 나누어 실현가능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국회의원과 분야 전문가, 연구위원 등과 함께 수차례의 분과회의, 토론회 그리고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많은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오늘 토론회가 당원 권한과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 나아가 정당정치 혁신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비전과 정책을 매개로 당과 당원이 견고한 연대의식하에 당원의 정당일체감을 고취할 것입니다.

내란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중심 정당을 위한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서복경 박사님, 성기선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이연희 국회의원님, 조영호 교수님, 권지웅 센터장님, 홍수지 당원님, 김의겸 당원님, 오종룡 당원님, 도민호 실장님의 열정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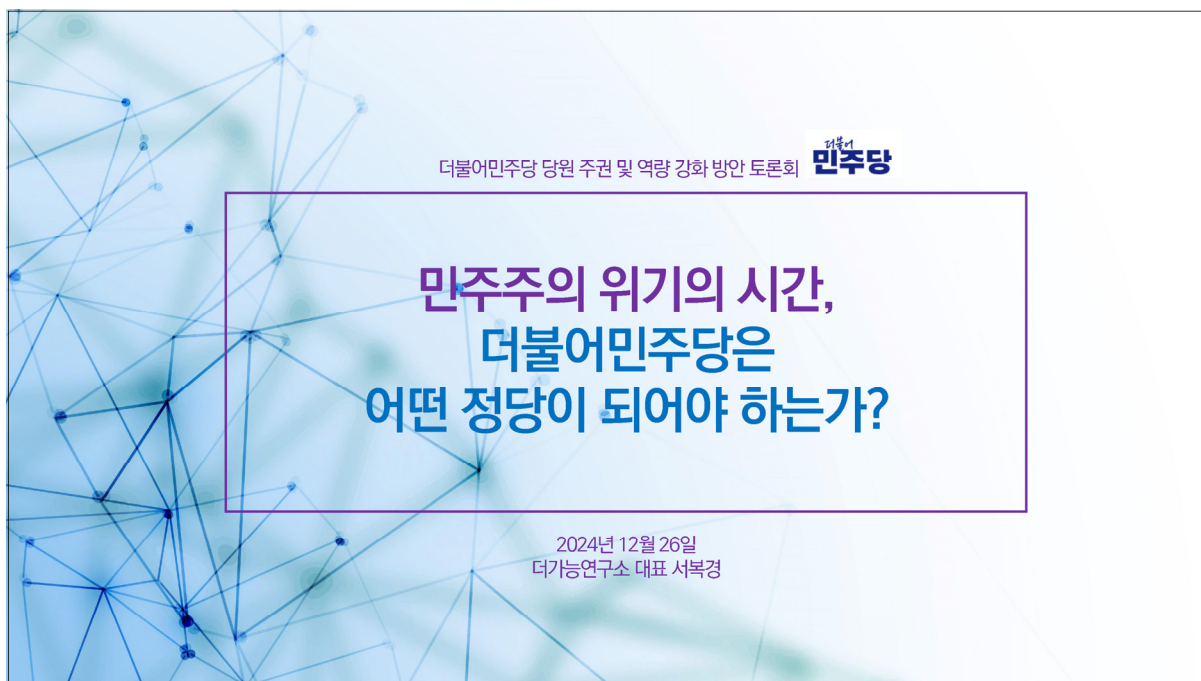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발제 1

민주주의 위기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

서복경 박사
(더가능연구소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위기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

2024년 12월 26일
더가능연구소 대표 서복경



**지금,
I.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내란...한국 민주주의 위기(2024.12)



비상계엄 선포가 뭐길래...1987년 이후 초유 사태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BBC 특파원이 본 한국의 지난 12일 - BBC News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탄핵 촉구 활동(2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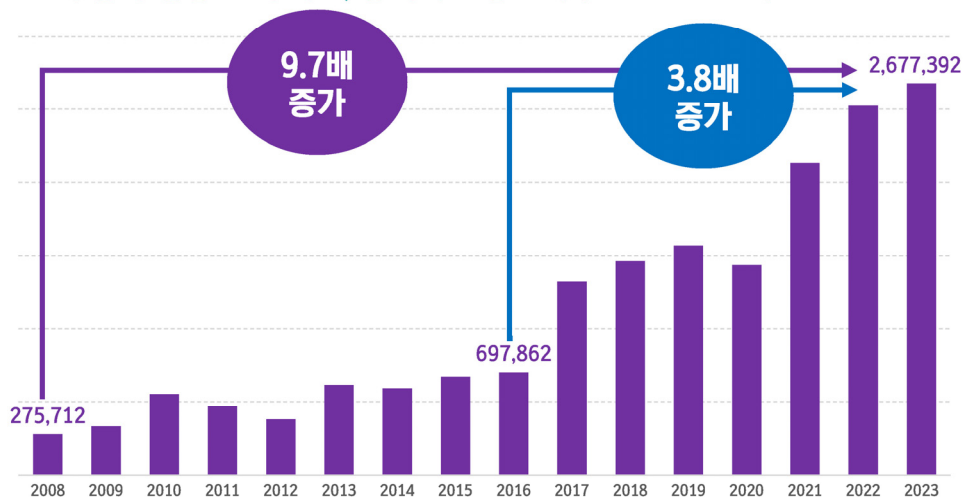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초강남 지역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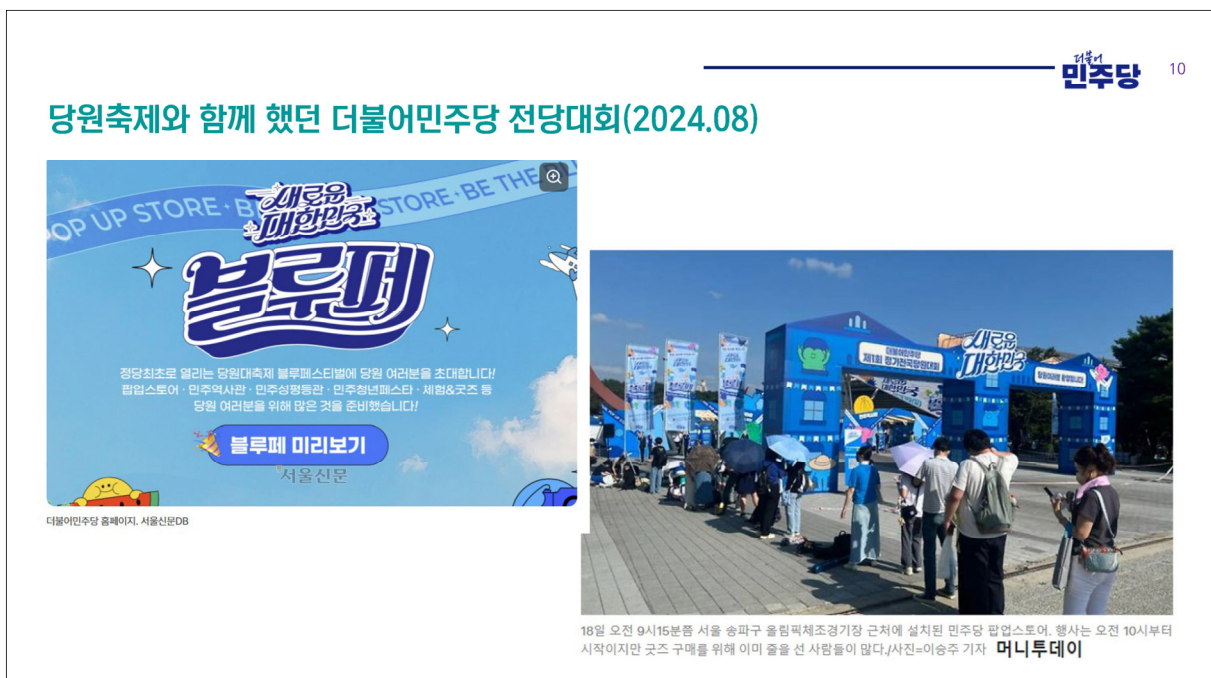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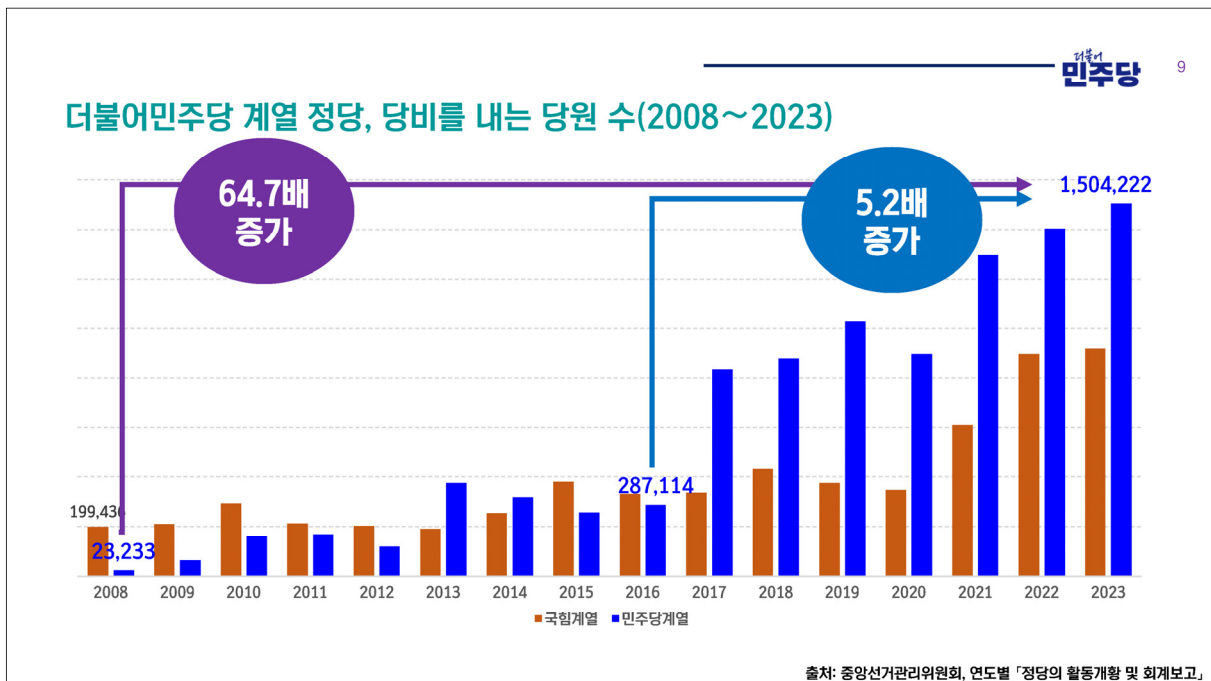
좌-우, 진보-보수 이전에 민주주의자들의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정치인, 관료(직업 공무원)들만이 지켜 나갈 수 있다.
- 좌-우, 진보-보수 이전에 민주주의인 것과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야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진보-보수와 민주주의 체제 안과 밖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제2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다.
- 민주주의 체제는 한 번 만들어 두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 당대의 정치인과 시민이 민주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다양한 시스템 중에 핵심은 정당이다.
- 2024년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사회를 유지하고 갱신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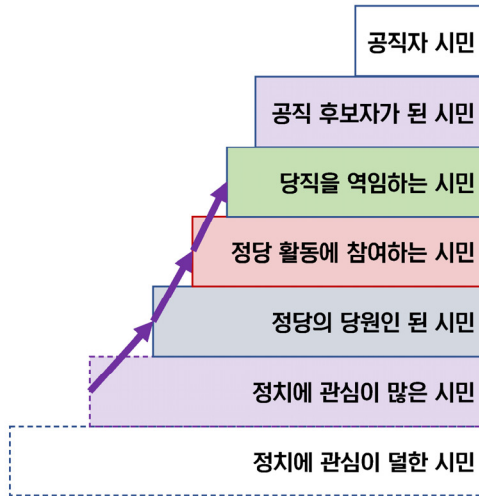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전체 기준, 당비내는 당원 수(2008~202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 어떻게 가능한가?



- 대의민주정에서 정당은,
-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여,
- 정당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자를 훈련하고,
- 당직을 역임하면서 공직 담임을 준비하며,
- 경쟁을 통해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를 검증하여,
- 공직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 앞에 내놓음으로써,
-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국가운영을 항시적으로 준비하는 조직.
-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당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민주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면서 민주주의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당원으로 초대하고, 당원들이 민주주의자로 훈련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의 관점

- 본 제안에서 ‘당원권 강화’는 정당 운영에서 ‘평의원 참여 확대’를 의미
 - ✓ 선출공직자 및 후보자, 선출당직자 및 후보자도 당원이지만, 본 제안에서는 특히 2016년 이후 급증한 평당원들의 참여 확대 방안에 초점
- ‘참여 확대’는 ‘책임 강화’를 수반
 - ✓ 참여 확대는 활동 영역을 넓히고 결정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 따라서 평당원들의 참여 확대는 정당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의미
- 한시적 참여가 아닌 일상적 참여
 - ✓ 전당대회나 선출공직 후보자 선출 등 한시적 이벤트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
- 당 전체를 책임지는 참여
 - ✓ 평당원들이 당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의 목표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재정조달, 득표 확대 및 정책 실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는 관점에서의 참여를 의미

II. 당원이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1. 당원권 제도화

1-1. 당원의 구분

현행

지역당원

정책당원

- '지역당원'만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나?
- '정책당원'만 정책 활동을 하나?

☞ 용어가 당원의 책임에 대한 혼란을 야기

변경 제안

개인당원

단체당원

- 국회의원 300명 중 254명이 지역구 선출
- 모든 당원은 지역위원회 활동을 할 책임. 1당원 1지역위원회
- 개인 가입 당원이 아닌 단체 가입 당원도 지역위원회 활동 책임

1. 당원권 제도화

1-2. 당원의 자격

현행

입당, 복당, 전적, 탈당...

- 입당? 원서만 쓰면 OK?
- 복당? 탈당했다 들어오는 게 정규절차?
- 전적? 어디서 어디로?

☞ 정당 역사의 흔적, 이제는 정리할 때!

변경 제안

당원 자격 획득/자격 유지/자격 상실/자격 박탈

- 당원 자격 획득 요건 및 절차 제도화
- 당비, 교육 이수, 윤리규범 준수 등 자격 유지 요건 제도화
- 자격심사에 의한 일시 자격 상실과 중대범죄 등 자격 박탈 요건을 구분, 제도화

1. 당원권 제도화

1-3. 당원의 권리와 책임

당비,지역위,
당원교육

당비 내고,
지역위원회 참여 당원

당비 꼬박꼬박,
정기적인 정보를 찾는 당원

당비 꼬박꼬박 내면서,
온라인에서 스몰톡만 하는 당원

당비는 낸 지 오~래,
but 활동은 안 하는 당원

입당한 지 오~래, but 당비는 안 내는 당원

지금, 입당한 당원

- 당원이 모두 똑같은 당원은 아니다.
- 당의 역사나 정책에 대해 좀 아는 당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도 있다.
- 당 돌아가는 걸 좀 아는 당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도 있다.
- 당의 일상활동-이런저런 회의에 참여하고 현수막도 걸고 정해진 당 정책캠페인이나 집회에도 참여하고-에 참여하는 당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도 있다.
- 당 돌아가는 걸 모르는 당원이 당직자를 선출하고, 당 정책을 모르는 당원들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면 어떻게 될까?
- 당의 역사와 정책을 모르는 당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고 공직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당원권 제도화

1-3. 당원의 권리와 책임

현행

당비만 내면 모든 권리 가능?

- 당비 납부만 하면 입당도 되고 자격 유지도 되고 대의원도 되고 당직도 되고 선출공직 후보자도 되고?

☞ 당비납부가 책임의 모든 것인 시대는 갔다!

변경 제안

권리에 비례하는 책임 제도화

- 당비납부 + 1지역위원회 가입 + 윤리규범 및 당헌당규 준수 + 당 추천 공직후보자 선거운동 참여 + 직책에 따른 정기교육 이수
- 중대범죄 확정판결, 윤리규범 위반, 타당 추천 공직후보자 선거운동 등 자격박탈 및 징계 요건 제도화

2. 의원, 당직자만이 아니라 당원도 ‘윤리규범’이 있어야 한다!



Join Labour Labour's Manifesto Labour People More

RESOURCES / Codes of conduct and welfare

Codes of conduct and welfare

Member's Pledge

I pledge to act within the spirit and rules of the Labour Party in my conduct both on and offline, with members and non-members and I stand against all forms of abuse.

I commit to treating all those I encounter with respect and courtesy whether or not they are in the Labour Party or a member of the public.

Whilst I am at Labour Party meetings, on the doorstep, in a campaigning environment, on social media or in any Labour Party gathering, I will:

- Listen to others' viewpoints, participate inclusively, challenge appropriately.
- Conduct reasoned arguments and not talk over others.
- Use constructive criticism consistent with Labour's values.
- Always act in an appropriate and respectful manner to others.
- Take care to use appropriate, non-offensive language.

Finally, I will not organise to drown out the views of others recognising the unfairness this creates.

By following this Code, I will help to ensure an inclusive, safe and constructive environment within the Labour Party.

I understand that if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Labour Party's codes of conduct, guidelines, policies and procedures on online and offline abuse, and if I fail to treat those I encounter with respect and courtesy, I will be subject to, and may be sanc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Labour Party.

2. 의원, 당직자만이 아니라 당원도 ‘윤리규범’이 있어야 한다!

현행

당직자, 공직자만 윤리규범?

-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내용은 당직자, 공직자 윤리규범?

변경 제안

평당원의 정당생활에 필요한 윤리규범 마련

- 당원 일반의 윤리규범, 공직자와 당직자가 더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구분
- 당원 정당활동이 온라인에서 많이 진행된다 는 점을 고려, 온라인 윤리규범 마련
- 당원들이 직접 ‘당원윤리TF’를 만들어보자!

3.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탄소중립 당원 실천 결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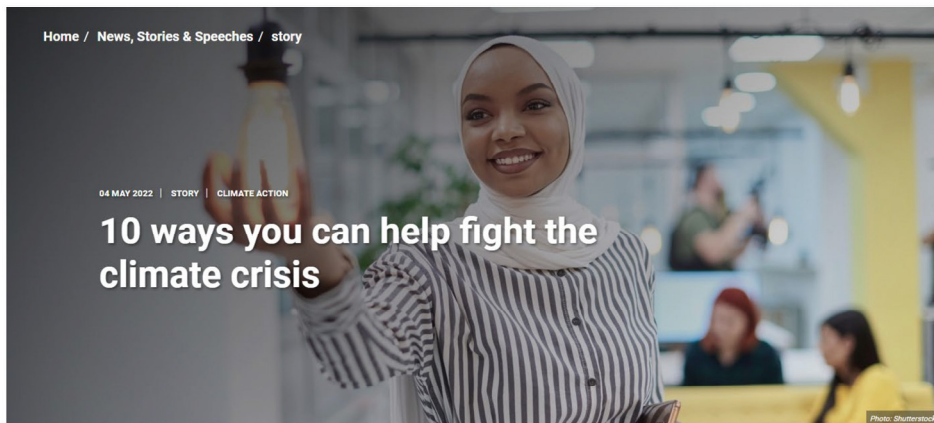


Who we are ▾ Where we work ▾ What we do ▾ Publications & data 

Home / News, Stories & Speeches / story

04 MAY 2022 | STORY | CLIMATE ACTION

10 ways you can help fight the climate crisis



3.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탄소중립 당원 실천 결의' 채택

현행

13개 정책목표 중 8번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제안

탄소중립 당원 실천 결의 채택

- 정당활동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고, 현수막 등은 재활용하고, 교통수단을 바꾸고, 식단을 바꾸고, 패스트 패션을 멀리하고, 정당 건물과 당원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달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먹고...

4. 당원일체감을 제고하여 정당(자)부심을 높이는 제안

4-1. 2년마다(전당대회 주기) 모바일 당원카드 발급 및 갱신

4-2. 첫 당원을 위한 '온라인 환영 키트+'

4-3. 더불어민주당 굿즈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연결, 일상적 정책 캠페인으로

4-4. '블루페' (당원축제)를 시도당, 지역위원회 총회 때도...

4-5. 당원과 당원을 연결하는 '당원 재능 나눔터(가칭)' 운영

4-6. 당원이 직접 선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5. 당원 초대 프로그램 정기 운영

5-1. 청소년 및 청년 당원 초대 프로그램

덴마크 정당 Youth Camp



At the youth camp participants came up with fictional political parties. Each party came up with a logo, ideological stance and made a political campaign.

덴마크 청(소)년 정당 캠프는 여러 정당이 함께 개최

노르웨이 노동당 Youth Camp



노르웨이 노동당은 자체 청(소)년 캠프를 운영

5. 당원 초대 프로그램 정기 운영

5-2. 더불어민주당 정책박람회



6. 당원 중심 정당에 맞는 [정당법] 개정

현행

모든 정당 조직은 똑같아야 한다?

- (당비내는) 당원 150만 여명의 정당과 200 여명 정당의 조직과 사무실 수, 유급사무직원 수가 똑같아야 한다?
- (당비내는)당원 수 2만여 명일때도, 150만여 명 일때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똑같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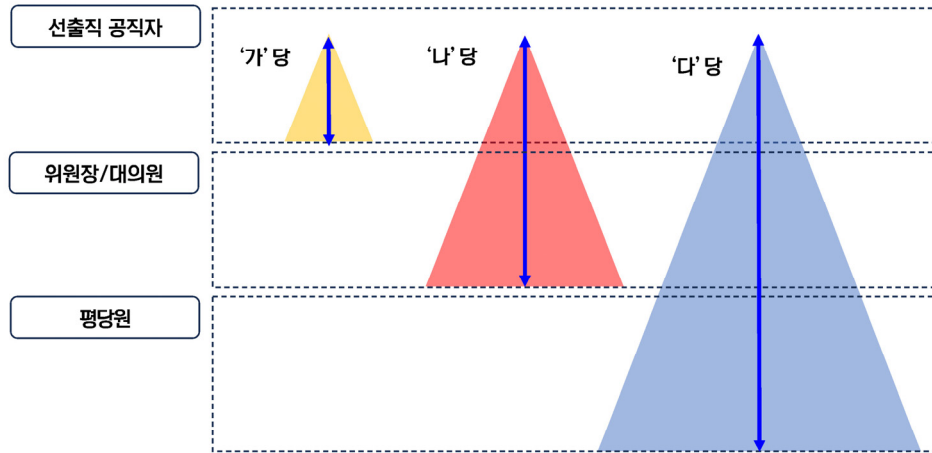
변경 제안

허용해 달라 X,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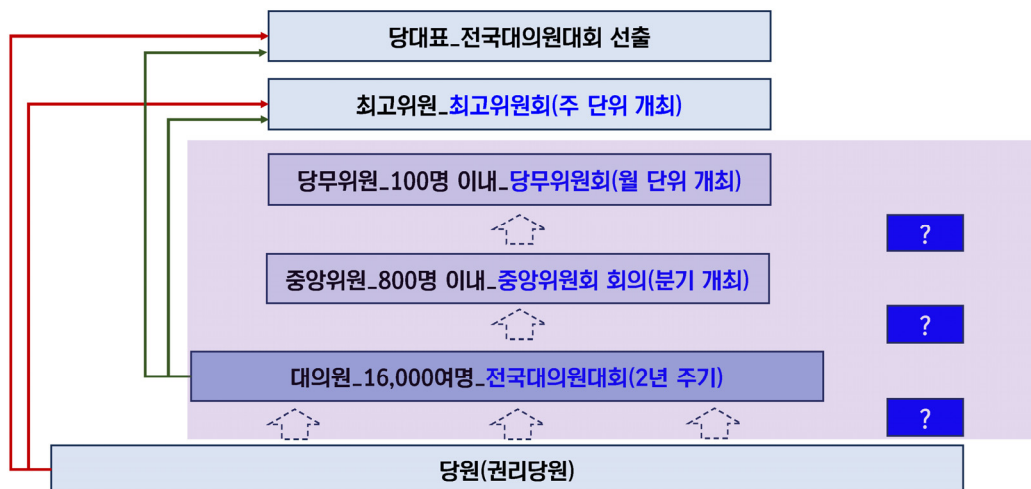
- 지구당 허용 X, 유급사무직원 수 상향 X
- 정당조직 및 기구 구성, 사무실 개수, 유급 사무직원 수 등은 정당의 능력과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Ⅲ. 당원 중심 정당에 필요한 당헌/당규

당원이 '있는'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의원, 대의원만 있는 정당과 달라야 한다!



당원이 '있는'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의원, 대의원만 있는 정당과 달라야 한다!



1. 정당조직의 기본요소, 당원/정책/재정

현행

정책? 재정?

- 강령/정책/공약은 뭇이 다른가?
- 강령/정책/공약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지?
- 내가 내는 당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지?
- 국고보조금이 많다는데 대체 어디에 쓰이지?

변경 제안

당원 참여 정책결정, 재정 책임성 원리 명시

- 강령/정책/공약 결정 과정에 당원참여 원리 명시
- 당원의 재정 책임 원리,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당원 알 권리 보장 원리 명시

2. 당원 활동에 필요한 당헌 정비, 당규 신설

현행

당원 관련 핵심 규정 미비

- 당원자격 획득/유지/정지/박탈 관련 절차 규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혼란
- 당원 자격 심사 및 징계 관련 내용도 여기저기...
- 당원 교육을 받으라는데... 규정은 왜 없나?

변경 제안

당원자격심사/징계 규정, 당원역량강화 규정 신설

- [당원 및 당비 규정] 보완, 체계화
- [당원 자격 심사 및 징계 규정] 신설
- [당원 역량 강화 규정] 신설

3. 정당조직은 당원에서 출발하여 상향식 구성

현행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 특별위원회...

- 대의원은 누가, 어떻게 선출하나?
-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나?
- 중앙위원회는 왜 대의기관이고 당무위원회는 왜 집행기관이지?

변경 제안

당원, 대의원, 지역위원회 순으로 재구성

- 당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규정 신설
- 당원→대의원→지역위원회/시도당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로 상향식 재구성
- 대의기관/집행기관 분류는 혼란, 당원 기반 상향식 구성 '조직' 과 방계 '기구' 로 재구성

4. 기구 중심 당규를 활동 중심 당규로 정비

현행

'000위원회 규정'

- 000위원회, 000기구가 뭐 하는 곳이지?
- 000위원회, 000기구와 나는 무슨 관계?
- 당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규가 필요하다.

변경 제안

기구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 당규 정비

- 조직강화특별위원회 → 지방조직 규정(포함)
- 윤리심판원 규정 → 징계 규정(신설, 포함)
- 선거관리위원회, 공직후보자...위원회 규정 → 공직후보자 선출 규정(신설, 포함)

6. 당헌/당규 DB 및 링크 기능 E-BOOK 마련

현행

당원 이해가 어려운 당헌/당규

- 더불어민주당 규범은 [강령]-[윤리규범]-[당헌]-[당규]-[특별당규] 400여 쪽 분량
- '정당법 상 요건을...', 정당법 몇 조 몇 항?
- '당규로 한다?', 몇 호 당규 몇 조?

변경 제안

평당원이 검색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DB

- [정당법/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과 [더불어민주당 강령/윤리규범/당헌/당규] 사이에 링크로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첫 당원에게 꼭 필요한 '누구나 용어사전' 마련

현행

000위원회? 000대회?

- 400여 쪽에 이르는 당헌/당규,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당생활의 경력이 쌓여야 한다.
- 신입당원이 당헌/당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다.

변경 제안

신입당원용 용어 사전 마련

- 당원 가입 2년 이내 당원들로 '용어사전TF' 구성
- 첫 당원 때 어려웠던 정당 용어 키워드 추출
- 중앙당 담당자들이 키워드 설명서 제공
- TF위원들이 검수하여 사전 초안 마련
- 당원 공개, 추가 제안 및 수정/ 연 단위 갱신

IV. 당원이 만드는 당원총회

1. 당원대회 안건 기본 모듈이 필요하다.

현행

당원대회 안건은 뭘까?

- 전국당원대회, 시도당 당원대회,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 당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뭘 알고 가야 하는 걸까?

변경 제안

활동 및 회계 보고, 당직 선출, 정책노선 결정

- 회기 단위 활동 및 재정 보고 및 평가, 승인
- 다음 회기 활동, 정책, 재정 계획 심의, 결정
- 단위별 대의원 및 주요 당직 선출
- 당원대회 안건 자료는 당원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미리 제출

2. 선출안건은 당원, 심의안건은 대의원

현행

당원과 대의원의 역할은?

- 전국당원대회 기준 당원들이 주요 당직 선출 주체인 건 알겠는데, 당원대회가 선출만 하는 건가?
- 다른 안건은 대체 누가 제안하고 누가 심의하고 누가 결정하나?

변경 제안

당직선출 안건과 심의안건 주체를 분리, 제도화

- 전당대회 기준, 현행 당직 선출은 대의원+당원+일반시민 3중 구조 → 당원 1인 1표 2중 구조로 전환
- 활동 및 회계 보고 안건 심의, 정책노선 심의 및 결정 안건은 대의원 주체로 분리

3. 지역당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현행

지역당원대회, 전국당원대회 따로, 따로

- 지역당원대회와 전국당원대회의 연결 지점은 어디?
- 당원은 지역당원대회와 전국당원대회를 각각 따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나?

변경 제안

지역당원대회에서부터 준비하는 전국당원대회

- 당 활동/회계보고, 다음 회기 활동계획 및 정책노선 관련 자료는 당원대회 전 제출
- 지역당원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대의원 선출, 지난 회기 당 활동 및 회계 보고 안건 심의, 다음 회기 활동계획 및 정책노선 심의 후 전국당원대회 개최

3. 지역당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V. 당 조직, 당원 선출 대의원 50% 보장

1. 전국대의원회의, 중앙위, 당무위 기능 중복문제 해결 필요

현행

대의원대회, 중앙위와 당무위 역할은?

- 정책 기능은 전국대의원회-당무위 소관
- 당헌 제개정도 전국대의원대회-당무위 소관
- 예결산 기능은 중앙위와 당무위 소관 불분명
- 중앙위 독립 권한은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투표, 비대위 구성권만 존재

변경 제안

전국대의원회의, 당무위 2단 체계로 개편

- 실재 운영에서 중앙위 독립적 기능이 미약, 현재 중앙위 구성의 다수는 당연직 위원
-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든 전국대의원회의/중앙위 혹은 당무위 2단 체제로 개편

2. 당원 선출 대의원 50% 참여 제도화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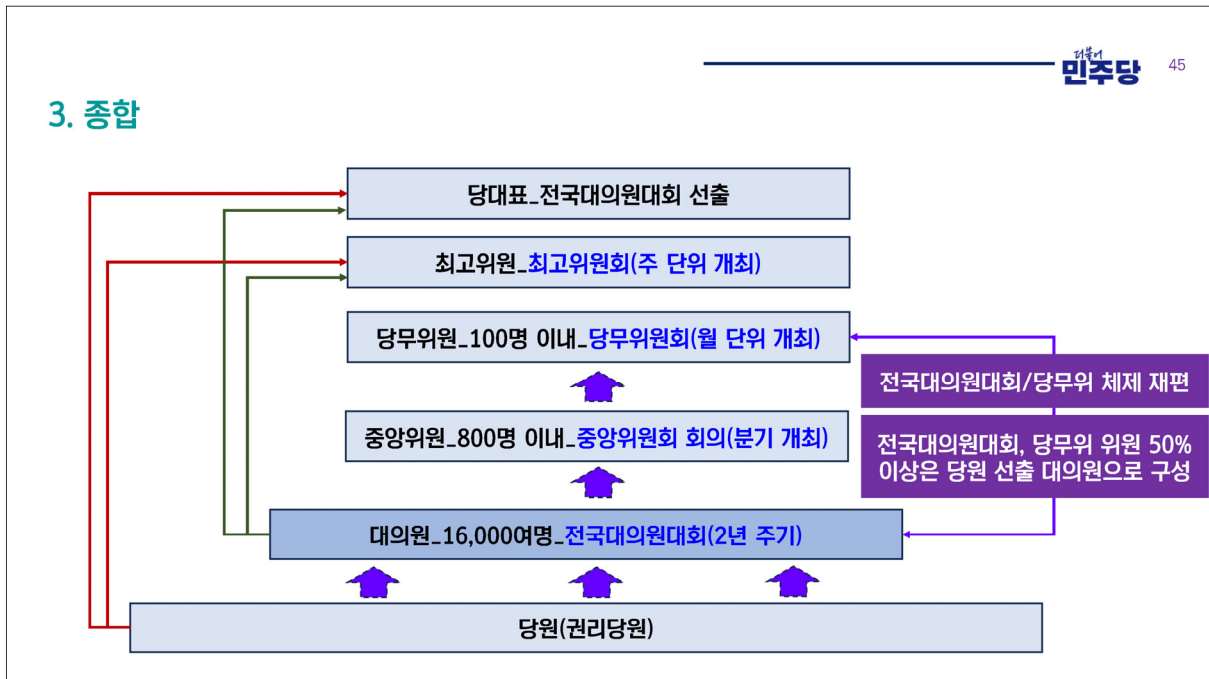
너무 많은 당연직, 당원들은?

- 전국대의원회의의 구성에서 상임고문, 온갖 위원회 정무직 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몽땅, 백년당원...
- 당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은 대체 몇 %나 참여?

변경 제안

당원 선출 대의원 50% 참여 제도화

- 당의 일상 운영에 당원 선출 대의원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당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
- 당원들이 당의 사람만이 아니라 당의 정책, 재정, 조직운영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
- 1안) 현행 당연직 위원수를 대폭 줄여 50% 참여를 제도화
- 2안) 현행 당연직 위원수를 유지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발 제 2

더불어민주당 당원 역량 강화 방안

성 기 선 교수
(가톨릭대)



더불어민주당 당원 역량 강화 방안

2024.12.26.

발표 :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왜 '당원역량 강화'인가?

최근 급증하는 민주당의 당원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당원들에게 정당 활동의 기초, 커뮤니케이션 역량, 정당정책에 대한 이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당원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반영한 후, 향후 구현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의 성격

당원교육 현황

- ⑩ 더불어 민주당 당규 제6조에는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명시하고 있음. 특히 당원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명시함. 하지만 당이 당원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⑩ 당원이 된 자가 어떠한 과정과 단계에 따라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만약에 그러한 과정을 이수한다면 어떤 인센티브와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⑩ 연수원과 지역별로 당원대상 교육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방안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연구는 어떻게 하였는가?

1. 전문가협의회

하위 영역별 연구방향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3회 이상)

권리당원, 정당교육 담당자, 정당 관련 연구자, 지역위원회 당직자 대상

2. 당원대상 인터뷰 및 FGI 분석

당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관련자 집단과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중 인터뷰 실시. 권리당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3. 사례분석

외국의 신진사례에 대해서 분석.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서자료를 활용하여 정당의 당원교육이 활성화된 지역의 운영 사례를 집중 조명

단기과제1

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 당원 특성별 **교육 수요 조사**
- 당원 특성별, **성장단계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구성
- 급증한 **신입당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신입당원의 권리 및 의무, 민주당의 역사와 구조, 정치적 문해력, 시민교육 등)
- **정치엘리트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정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당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당원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 당원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용 매뉴얼 작성** 필요
 - 교육과정의 기본안을 중앙당에서 마련하여 지역위원회에 공유, 지역위원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수정사용
 - 당원교육 전문 강사진풀 구성. 다양한 교육활동에 강사진의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정치현안, 선거법, 민주시민역량, SNS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주제별 강사 풀 구성 및 운용
- **전국 교육연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정례화 하여 연 2회 실시

단기과제2

‘**청년 정치 발전비**’에 대한 참여 예산제 도입

- 청년 정치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임.
- 2022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매년 정당 경상보조금의 약 5%로 책정되는 ‘청년 정치 발전비’**를 당내 청년들을 위하여, 당내 청년들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야 함.
- ‘**청년 정치 발전비**’에 대한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당사자인 당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급 청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공모 형태로 예산을 수주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청년들의 효능감과 참여 확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임.
 - 예시 :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주최의 <2024 서울청년 연설대진>, 전국청년당의 <청년대변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중앙당의 관리·지도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자체 예산을 확보한 청년 단위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

민주청년정치학교 운영 : 청년당원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다양한 교육연수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큼.

단기과제3

정책 해커톤(hackathon), 연설 대전 및 토론회 등 연례 프로그램 운영

• 정책 해커톤 대회 개최

- 해커톤(hackathon)이란?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획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개발 경진대회를 의미함.
- 청년 정책 엑스포, 연설 대전 및 토론회 등 기존의 행사처럼 일회성이 아닌 연례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 주최의 포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당원들이 향후 정치·사회적 커리어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당대표, 민주연구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행사 주최 측의 포상 실적이 각급 공천 및 보좌진, 당직자 지원 시 가산점 적용

단기과제4

정책적으로 무장된 직능위원회 재설계

- 유명무실한 직능위원회 인력 pool을 유능한 행동가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 차원에서 직능위원회의 직능별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함.
- 교육연수를 받은 이들에 대하여 교육연수원 산하 부원장 및 위원 후보군 포함 자격 부여.
-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미디어 pro'와 같은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도 이수자들이 다음 해의 지역위원회 교육·연수의 강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예시1〉 전국의 노인위원회에는 정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원로 당원들이 많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각종 소셜 미디어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언론 기사 댓글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음.

〈예시2〉 탄소중립위원회의 경우, 기후 위기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법, 에너지 절약 팁과 같은 실용적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효능감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단기과제5

민주당 예비 보좌진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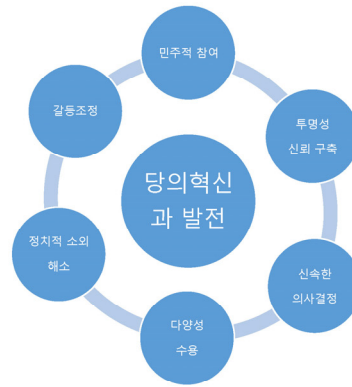
- 국회 보좌진의 세계는 일종의 블랙박스과 같아서 채용에서부터 지위와 역할, 직급별 임무 등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음.
- 정책 정당, 강한 민주당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을 이해하고, 정당 일체성이 명확할 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양질의 예비 보좌진을 양성할 필요가 큼.
- 민보협(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민주당 예비 보좌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던 (예비)보좌진 직무 프로그램 정례화, 보좌진 및 당직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등에 관심 있는 2030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교육연수원 및 민보협 회장 명의의 이수증 수여, 우수 이수자는 의원실 채용 및 당직자 채용 시 피 추천인 자격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역량 있는 보좌진 및 당직자 양성 가.

단기과제6

새로운 온라인 공간 창출

1. 당 홈페이지 내 교육연수 페이지 재구축
 - 교육 관련 콘텐츠는 클릭 한 번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중앙당 및 시·도당 혹은 지역위원회의 교육연수 관련 소식 제공
 - 참여당원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연수 마일리지 제도, 교육연수 모바일 이수증 발급
2. 사업별, 목적별, 지역별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알림톡 활용
3. 당원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성
 - 모바일에서 작동하는 종합학습포털 앱 개발 운용
 - 뉴스레터, 현안 대응 자료 및 교육용 동영상, 유튜브 탑재
 - 실시간 모바일 여론조사 및 투표 실시 기능 첨가
 - 정책 홍보와 공유 기능 강화

모바일 정당 구축



단기과제7

교육역량 강화 시범 지역위원회 운영

- 당원 수요 조사에 근거해 새롭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점검, 교육 효과 검증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가 정책실험을 하듯, 특정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 및 개선한 뒤 전국 단위로 전파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먼저 전국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 지원을 받은 뒤 최종 선정된**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파일럿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예산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
-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교육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표준 프로그램을 확
- 확정된 표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시범지역위원회의 경험과 함께 전국 지역위원회로 전파할 것을 제안함.

중장기과제1

장학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나 에버트 재단이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제공하여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민주당도 국내·외 기관으로의 장학 및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 첫째, 다양한 기관과 국가로 교육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연수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와 참여 열기를 제고할 수 있고,
- 둘째, 당원들의 안목과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기후위기, AI 규제 마련 등 글로벌 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중장기과제1

교육연수원 강화

- 임기가 보장되는 임기제 교육연수원장을 임명
- 교육·연수와 평가에 이르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연수원 시설 확보 문제임.
- 모든 정당이 당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 정부 차원의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 법제화
- 지방의 유휴 시설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더불어민 커뮤니티센터(가칭)' 구축
- 교육, 연수와 함께 당원 생활공동체 형성에 적극 활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폐교 활용 : (시범 프로그램) 당원 밀집도가 높은 경기도 내 폐교 한 곳을 장기 임대 → 퇴직 당직자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고 교육연수원의 집중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 → 서울시당 및 경기도당의 지역위원회 단합대회 장소, 직능별 동호회 모임 장소, 당원들의 캠핑 사이트 및 당원들의 직거래 장터 장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거점 (권역별) 커뮤니티센터 →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

당원 주권 강화 방안

이연희
국회의원



당원 주권 강화 방안 토론회

이 연 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

당원 주권 강화 방안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당원 주권 강화 방안 토론문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선생님의 “민주주의 위기의 시간, 더불어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 주제 발표문을 잘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정치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좋은 글을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는 비교론적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정당 당원의 증가는 예외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근대화와 합리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본인의 이익과 관심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서구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당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당만의 현상은 아니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최근 당의 중요한 선거에서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참여주의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서구에서 당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정치참여주의 political activism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비제도적 비정당적 통로를 통한 참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서구는 물론 세계적으로 3-4배 정도 횡수와 규모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열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소 흡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경 선생님은 정당이 현대의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정치발전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당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선 긍정적으로 간주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당원이 증가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계엄을 온몸으로 막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그렇게 빨리 동원될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당원의 증가는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조건이라고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조직적 차원에서 참여의 열기를 수용할 정당의 내부적 인프라의 개선이 없이는 참여의 열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나 민주적 책임성보다 당에 대한 책임성을 더 중시하려는 움직임 등이 있는데,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괴리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참여의 확대/증가는 그에 조응하는 조직화 및 제도화와 병행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했던 우려와 문제를 낳습니다.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개혁들은 그것이 의도한 긍정적 결과를 낳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히려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도개혁 만능주의나 헌법개정주의에 대해서 가급적 유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많은 참여 민주주의자들은 참여 민주적 개혁이 실행된다면, 기존의 자유/대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개선되고 시민들의 덕성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진보적 정치인과 정당들은 1980년대 이래로 이를 주창하고 입법화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넓어진 참여 민주적 제도들은 오히려 포퓰리즘이나 극단적인 세력들이 발흥할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덕성이 높아졌는가를 보자면 많은 참여자들은 실망도 커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신도 함께 커졌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참여와 숙의에 숙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분노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둘째, 제도적 인프라 확대/개선과 관련하여 정당의 지도부, 책임 있는 지도자는 이러한 현상을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의 열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는 선거가 잦고 정당 지도부의 불안정성이 높고 정치인들의 경륜과 경험이 높지 않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늘 바쁘고 빨리빨리 선거를 준비하고 이겨야 하는 일상 속에서 참여를

이용하는 데 급급하여 이를 제도화할 시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참여의 열기가 높아진 시기는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칭찬하고 고무하는 것은 좋지만, 지혜와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참여의 열기가 고조는 역사적으로 현재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기에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서유럽에도 산업화와 도시화 및 투표권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참여의 열기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회조직화가 가속되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자리 잡고, 취미나 직업, 정당, 혁명 조직 등에 매진하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 질서의 붕괴로 인한 실존적 불안,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혁명 이데올로기, 충분히 부유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느리고 되는 것도 없는데 싸우기만 하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정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의 열기가 영국에서는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진 반면 독일에서는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아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둘 다 참여의 확대와 정치적 욕망의 고조는 자명하였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Daniel Ziblatt와 컬럼비아대 Sheri Berman은 서로 다른 저서에서 인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수용하고 소화할 허약한 정당을 지목합니다. 특히 정당들 중에서도 대중동원에 기초한 진보정당들보다, 대중의 진출에 두려워 개혁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려는 보수당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중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 혹은 지속의 핵심은 보수정당이 얼마나 이를 수용하면서도 개선에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 이를 잘 제도화하여, 보수정당이 공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극우와 결별하고,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인·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하자면, 먼저 참여의 증대에 조응하는 정당 내부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선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지도부와 리더가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세련된 관리에 들어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이 민주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위협하기보다는 유도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

당원 주권 강화 방안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당원 주권 강화 방안 토론회

권 지 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

당원 역량 강화 방안

홍수지

서울시 동작구 활동가



당원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홍수지 서울시 동작구 활동가

○ 문제제기 및 서론

당원 가입이 얼마 되지 않는 현재, 특히 신규유입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내 활동과 당원주권과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았음. 특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선거의 이슈가 존재할 때, 또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은 중대한 국정 이슈가 존재할 때에 신규 당원들이 참정의 목적으로 입당함.

이 참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각종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자들을 돕는 선거캠프에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함. 둘째, 당 내부에서 당직자 등의 직무를 맡아 보고자 입당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으로서의 당원가입은 세 번째의 이유인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가입을 했으리라 추정함.

이 신규유입당원의 교육은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당의 외연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내연적인 견고함을 다져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대중정당으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본인 역시도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총무관 앞에 존재하는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역사만 공부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함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기저에 가지다가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 평소 존경하던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인 김용만 당시 후보(현 국회의원)이 출마하여 현재 당선되어 하남시(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됨을 계기로 입당 의지를 굳혀 입당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인과 같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평소에 기저에 있는 신념이 확고해질 경우 신규 당원들의 유입은 무엇보다 많아질 것이며, 청년 당원들의 경우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국에 따라서 입당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당과 지도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신규 당원교육의 제안

우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당원들은 당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어느 위원회(예 : 청년위원회)에 속하는지,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가 많이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① 더불어민주당의 입당과 동시에 본인의 연령, 직능에 대하여 입력한 정보에 의거하여 해당 위원회를 추천한다. (예 : 2002년생이라면 청년위원회)
- ② 해당 위원회의 안내에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지역별로 어떤 세부적인 위원회가 있는지 소개한다. (예 : 서울시 소속이면,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알림)
- ③ 소개한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지역의 청년위원장 등의 연락처나 연락할 수단을 해당 당원의 허가를 받고 공개한다.
- ④ 신규 당원이 연락을 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다음으로 신규 당원들의 경우 해당 기관들이, 해당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존재함.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수많은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와 TF등이 존재하지만 이 위원회 또는 TF팀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신규 당원들과 기존 당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하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① 신규 당원들의 경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존재함.
- ② 민주 E 아카데미 등에서 당원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존재함. 또한, 민주 E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이 물론 양질의 교육 자료임은 분명하지만 이의 경우 어떻게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여야 할지 등에 대

한 방법적인 차원의 교육을 시행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임.

- ③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소개 - 사람들 - 중앙당에 각 위원장의 소개에 각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방법을 제안함.
- ④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소개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페이지 등을 추가하여 보다 더 신규당원이 당원주권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이 두 가지와 함께, 신규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알리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당원유입의 지속적인 것과 발맞추어 당원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다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함.

회차	강의내용
제 1회차	민주주의의 원리 : 정당의 구성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성
제 2회차	민주주의의 정당 :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철학까지
제 3회차	민주주의의 역사 : 시민혁명부터 여의도 광장까지
제 4회차	민주주의의 현재 : 우리는 당원으로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 강의를 위하여, 해당 강의를 가장 목적에 맞고 당원들의 눈높이에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진의 섭외도 무엇보다 중요함.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중정당이 어렵지 않고 친숙하며 우리 곁에 있는 대중성을 위한 강의 진행도 중요하기에,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함.

- ▶ 위 두 가지와 표 속의 교육을 통하여 당원주권시대를 열어가기로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당원이 당원주권을 지니며 정치적인 효능감과 동시에 당내 활동에 폭넓게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당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됨.

○ 당원교육의 제안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해당 당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당원주권을 위한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이미 당 내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당원도 중요하지만, 입당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전국당원대회의 선거 제외)을 하지 않는 비교적 소극적인 당원도 존재함. 이 역량강화의 본질은 적극적으로 당내 활동을 하는 당원의 역량을 길러 우리 당 내부에서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역량강화의 본질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당내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있는 당원들이 당과 사회를 위하여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대하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초심찾기 프로젝트(가칭)’을 통한 당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목적 : 더불어민주당에 왜 입당을 하였으며, 해당 입당을 통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자 추구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당내 프로그램 등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당원으로서의 주권을 찾고 당내 활동에 대하여 방향성을 찾는 데에 있음.

■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시행함.

대면의 경우, 당내 여건에 따라 중앙당의 당원존과 각 시도당, 기타 집합 교육이 가능한 장소 등에서 집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에서 시행하며, 기간은 하루 또는 1박 2일로 진행함.

비대면의 경우 대면 시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1달 과정을 하여, 4주에 나누어 교육을 시행되도록 함.

대면과 비대면 모두 사전에 신청자들을 모집함.

■ 내용

제 1강 : 내가 당원이 된 육하원칙 찾아보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원 가입을 할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강의와 활동을 진행함.
(예시 : 김민주가, 2022년 01월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당원가입을,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 2강 : 내가 당원이 된 목적 구체화하기. ‘내가 왜 더불어민주당원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찾아보는 강의와 활동을 진행함.

(예시 : 김민주라는 당원은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했는데, 그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동기부여연설가 또는 당내 인재에게 강의를 듣고 이에 ‘아동학대 등을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결론에 다다름)

제 3강 :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당내에서 찾아보는 활동에 대한 강의와 활동을 진행함. 단, 제 3강부터는 보다 더 세부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관심사나 목적이 동일한 당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해당 그룹에 맞는 강사진, 당내인재

등을 배치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또한, 다음 강의 까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써 오게 하는 것도 방법임.

(예시 : 김민주라는 당원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을 때에, 당내에서 선출직으로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서 실행하는 방안, 당내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정책을 제안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제 4강 : 모의국회 또는 모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만든 정책의 실현성을 논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당원들과 해당 경험이 존재하는 선출직 당원들과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한 경력이 존재하는 당원들(이하 ‘멘토당원’)의 코멘트로 마무리를 함.

(예시 : 김민주 당원의 ‘우리 동네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해당 당원의 관심사와 함께 하는 모의 복지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토론했을 때, 마지막으로 해당 경력이 존재하는 멘토당원의 코멘트로 마무리함)

■ 결론 및 의의

결론 : 본 프로젝트를 마친 당원들의 경우 당대표 및 지역위원회,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여 해당 수료증을 추후 당내 각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의 : 비교적 소극적으로 활동하던 당원들이 본 ‘초심찾기 프로젝트(가칭)’을 통하여 동료 당원들과 멘토당원들에게 같은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또, 이 활동을 통하여 당내에서 선출직,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하여 정치효능감과 함께 당내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종합 및 결론

본 제안은 2024년 올해 입당한 신규당원의 시각으로 본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시하는 것임. 따라서 본 제안 방안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 보다 더 당원으로서 경험이 많은 선배 당원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토론과 연구, 그리고 신규 및 기존의 여러 당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연구발표회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여 시행한다면 더 많은 현명한 방안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당원주권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시킨 당원주

권으로 당내에 보다 내실있는 인재들의 구성으로 인하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장차 존재할 여러 선거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보다 더 대중정당, 실력을 갖춘 정당, 인재가 많은 정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끝으로 이번 제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심도 있는 생각과 공부를 통하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에 감사드리는 바임.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

당원 역량 강화 방안

김 의 점

경기도 파주시 활동가



당원과 함께 걷는 교육

김 의 겸 경기도 파주시 활동가

I. 서론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상당한 시간을 민주당원으로 활동했고, 그 중 상당한 시간을 대학생위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대학생위원회 당원들은 민주당을 통해 정치를 배우고 시작하는 단계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치 혐오, 정당 혐오가 어느 세대보다도 강한 20대에게, 당원 가입과 활동은 개인의 인생에서 큰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 활동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동시에 취업이나 학업을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 결심이 개인에게는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교육이나 정책 활동이 당 차원,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정책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이 꽤 많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내용 자체로 호응받고 관심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프로그램은 그렇지 못합니다. 출마를 위해 당원 교육 시간을 채우거나 수료증이나 임명장을 받기 위해 교육이 이뤄지고, 선거에 맞춰 급하게 진행되는 정책 간담회나 정책 제안은 조급합니다. 수료증이나 임명장은 당을 벗어나서는 거의 활용도가 없기도 합니다. 당원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을 만들고, 당원과 함께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이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20대 당원으로서 같은 20대 당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당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했습니다. 우리 당은 새로이 정당에 입문한 청년 세대에게 배움과 희망을 주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것을 당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배운 것을 통해 사회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우리 민주당에서의 20대의 활동이 좋은 사람들과 기억, 그리고 배움이 남겨질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II. 당원 교육 강화 방안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교육과 각 지역위 또는 상설위 차원의 당원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이 당원과 함께하는 교육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드립니다.

1. 상설 교육의 필요성

민주당의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당이나 지역위, 상설위 차원의 교육들이 대부분 선거나 이슈에 맞춰 긴급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많은 교육들이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와 제목을 선정하고, 급히 장소와 날짜, 강사를 섭외하고, 동시에 참가자를 섭외합니다. 교육 홍보와 준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강사가 참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교육을 상설화하여 교육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기획하여야 합니다. 일정과 주제를 미리 정하고 준비하면, 다양한 방식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1년 또는 반기 단위의 코스로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대 당원을 대상으로 생각했던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1)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국회 입법(법률), 대통령 및 장관의 입법(명령·시행령), 지방의회 입법(조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법률의 취지와 개정·제정의 차이점, 헌법의 중요성과 개헌의 필요성 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교육

2) 여론조사와 당론 :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며, 당론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당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

3) 당원의 책무와 권한 :

당원이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당원이 가진 권한은 무엇인지,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등

상설화된 커리큘럼으로 당원 교육을 재정비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의 집

합체가 아닌 집권과 국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원이 당 가입 여부로만 정의되지 않는, 권리당원이 당비 내는 여부로만 정의되지 않는 민주당이 되려면 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2. 수요자 중심 교육

상설 교육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획도 필요합니다. 4~50대의 고민과 1~20대의 고민이 다르듯, 같은 민주당원이라도 지역과 세대, 관심사에 따라 정체성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역과 상설위 별로 필요한 교육 수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교육을 상설화함과 동시에 지역위와 상설위의 위원 대상의 수요조사나 간담회를 통해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기획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설위원회 당원들과 당 교육 기획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창구는 교육 기획뿐만 아니라, 교육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기획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당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당원의 경우, 당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향후 직무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희망하는 당원을 위한 글쓰기 교육, 보좌진이나 선출직을 희망하는 당원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입법 교육,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희망하는 당원을 위한 AI 및 금융 교육 등이 당 차원에서 준비된다면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당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당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체험/실천 교육

기존의 당원 교육은 대부분 급하게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강사도 정하다보니 형식적으로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강연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의례적인 문답과 의견 교환으로 마치는 교육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국회나 정당의 토론회나 간담회, 세미나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당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의 형식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걸어온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느끼려면 노무현 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 유가협, 민주화운동사업회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나 추모관을 찾아가, 당원들이 민주당이 지켜가야 할 가치를 직접 느끼는 교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시도청 등을 방문하고, 우리 민주당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또한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실천 중심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당 차원에서 봉사와 캠페인을 통해 선한 가치를 직접 실현하는 경험을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농촌, 복지관 등을 방문하며 당원들이 함께 선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닌, 몸소 경험하며 가치를 체득하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4. 당원 교육을 통한 정책 플랫폼 제시

매주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평가하는 갤럽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1,000명의 의견만으로도 국민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무려 140만 명의 당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대한민국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규모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에게 펼쳐지기 전에 당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국민 수준에 준하는 정책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의 경우 청년당이나 대학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나 조사를 진행한다면,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 공약이나 당론으로 다뤄지는 민생 정책의 경우, 각 상설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하는 절차만 마련되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당원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당원이 이러한 정책적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개혁과 정책적 해결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막중한 책임을 가진 민주당에게는 정책을 함께 제시하고 만들어갈 당원의 중요성이 또한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당원 개인

에게 배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당원을 훌륭한 정책적 자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정책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려면, 개별 당원들이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사전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정책적 주체로 키워내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 론

당원 역량 강화 방안

오 종 룡

경기도 용인시 활동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당원 역량 교육

오종룡 경기도 용인시 활동가

1. 눈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라

“모든 정치활동을 판단할 때는 외양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이 출발 명제이다.

정치적인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유권자가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 쉽게 조종당하고, 속고, 오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어렵다.

생업에 종사하는 당원들이 정치인들에게 손으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쉽지 않다.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 인해 정치가 내 손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일맥상통 된다. 정치인의 잘못인가, 당원의 잘못인가.

불과 얼마 전의 나를 생각해보면(이는 순전히 주관적인 상황이다.) 정치인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정치인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에 의해 정치인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있다. 내손에 닿은 정치인을 통해, 내 손으로 정치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2. 국회보다 더 멀게 느껴졌던 지역위원회 사무실

2023년 여름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역사 논란’이 발생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경도된 인물들이 홍범도 장군을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현수막들이 용인병 지역(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홍범도는 빨갱이다’라는 문장이었다. 1943년에 사망한 장군의 유해를 80여 년 만에 봉환해서 안장한 지 2년 만에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했다.

‘역사를 정의롭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기에 독립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은 북한 정권 수립 전인 1943년에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고있어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었다.

마침 생각난 곳이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사무실이었다. 난생처음 정당의 지역 사무실에 전화했다. “역사를 강의하는 처지에서 홍범도 장군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현수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빠른 시기에 당원과 시민을 위해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라는 역사 강좌를 개설해 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때 받은 대답은 ‘민원 소통의 날’에 와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 강의가 있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하니, 시간에 늦게 오면 다음 기회에 시간을 맞춰서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차대한 역사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지역사무실에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무런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당연히 우리역사 제대로 알기와 같은 강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홍범도는 빨갱이다’라는 현수막은 국민의 힘의 당 로고인 빨간색과 함께 수지구 곳곳에서 오래도록 휘날렸다.

3. 시대정신이 필요한 교육(용인 지역 · 역사 강의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한 시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그 문제점에는 이념이라는 거대 담론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부분들이 더 많다.

1884년,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정변의 주동자였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은 양반 문벌 가문의 금수저 자제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당시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변의 실패 원인이라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의 염원인 토지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은 다른 면이 있다. 농민군들이 남긴 내용들은 세상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속박하는, 억압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척결하고자 하는 것들이었다. 고부 농민봉기 당시에는 4개의 개혁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집강소 설치 이후에는 대략 12개 조항으로 압축시켰다.

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 등이 강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집강소에서 폐정개혁은 차

분하게 추진된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중단되었지만, 전라도 각 고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진행됐다. 풀뿌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들에 민(民)들이 열광하지 않았는가.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일본(왜)과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갑오개혁에 반영됐으며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통해 최초의 민중집회로 성장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20년 넘게 역사 강의를 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다. 방송에 나오는 역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는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 내가 사는 용인특례시의 역사 관련 내용도 꼼꼼하게 살핀다. 무엇보다 용인만이 담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김윤후와 처인성, 조선시대 개혁적 선비의 상징인 조광조와 심곡서원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 용인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용인특례시의 매력과 특징을 담아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인 민주당 용인시 병 지역위원회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 당원과 시민을 위한 올바른 역사 강좌 프로그램 개설도 요구된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 역사 강사를 초대하는 일회성의 강의는 한계가 있다. 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강의는 꾸준함이 생명이다.(이는 다른 강좌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요구하는, 당원과 시민이 요구하는 장·단기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략이나 비약은 없어도 지름길은 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는 있다. 시민을 위한 강좌는, 부족한 정치적·역사적 두께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즉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

추가하자면, 이는 지극히 중요한데도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중립을 가장한 강사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결이 다른 강사를 민주당에서 초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려면 개혁 저항 세력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한다. 독일의 시인 볼프 비어만의 시구인 ‘변하는 것만이 지조를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자가 개혁의 대상 세력이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타협과 절충은 미봉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강력한 당원이 필요하다. 당원은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 즉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때문에 민주당에 요구되는 강력한 당원 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필요한 강력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요구된다.

또한 당원들에게 민주당이, 당원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폭발하는 당원의 참여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을 무장 시키기 위한 당원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며, 시기인 점도 분명하다.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의 작은 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그 시대의 구성원들에 필요한 당원 역량 교육은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의 출발이자 완성이다.

〈참고문헌〉

- 김효연(2017), 「시민의 확장」, 스리체어스
 호광석(2005),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이정진(2024), 「한국의 정당정치」,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버니온더문
 모리치오 비롤리(2017)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안티고네
 이덕일(2005),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마리서사
 강인식, 함병권(2012), 「선거도 마케팅이다, SNS로 通하라」, 아이엠북
 윤종빈, 정수현 회(2019), 「한국의 당원을 말한다」, 미래정치연구소
 민주연구원(2024), 〈더불어민주당 당원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

연구자 : 성기선, 박석균, 신현기, 정성은, 오영균, 김태철, 고영국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 및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토 론

당원 역량 강화 방안

도 민 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전략기획실장



당원주권시대에 교육연수사업 정비를 통한 당원역량 강화방안

- 서울시당 당원교육사업을 중심으로 -

도 민 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전략기획실장

1. 배 경

- 우리당은 당원조직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 그리고 지역위원회 단위까지 당헌·당규에 입각한 당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선출직공직자로 출마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조건으로,
- 우리당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거나 또는 출마하고자 하면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당원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당원역량 강화를 통해 당 정체성과 정책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당 활동의 하나로,
- 단순히 당원의 역할을 넘어 정책 생산과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됨
- 이를 통해 일관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의 정책홍보와 설득력을 강화하는 등 당원 개개인의 정치적·조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2. 서울시당 현황

- 서울시당은 그동안 당원의 니즈(Need)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 사업을 진행해 오

-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한 <신입당원 아카데미>
- 공직선거후보자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아카데미>, <서울야학당>, <민주인사이드>
-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향기나는 사람과의 만남, 서울 민주당아카데미> 등 당원 맞춤형 사업을 정례화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음
- 위의 교육연수사업의 공통점은 모두가 피교육생, 즉 당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차이점은 대상자가 다를 뿐
- 특히 서울시당의 <신입당원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차례를 진행 하면서 3,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정례화된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신입당원아카데미>는 곧 전국 시도당으로 전파
- 서울시당은 내년 초 민주당 집권시대를 위해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조기 시행하여 유능하고 준비된 지방선거 후보자를 발굴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서울시당 교육연수사업>

3. 한계 및 문제점

- 교육연수담당자는 수준 높은 당원교육을 기획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음
- 정당법 제37조2항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정당 활동 중 당원교육은 보편화 된 정당 활동
- 그만큼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연간 활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
- 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연수를 위한 예산 배정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음.
- 당원조직강화 사업의 일환인 교육연수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

-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정당관계자 연수 비용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정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당원주권시대에 당원교육 사업의 확대는 당연
- 이를 위해 중앙당 교육연수원의 예산 배정과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당 교육연수원의 인력 보충은 더욱 절실함
- 시·도당의 경우 부족한 인력은 정원 문제로 어쩔 수 없지만 연간 당원교육에 필요한 예산 배정은 의무화해야 함
- 또한 일관된 당원교육을 위해서는 인사명령에 의해 담당자 교체 시 보수교육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담당자에 따라 교육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임
- 당원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교육연수원 차원에서 한 해의 당원교육 기조를 시·도당에 지침으로 하달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 아울러 이제는 정당의 계획하에 진행되는 당원교육의 경우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
- 불가피하게 숙박이 포함되는 일정에 당원의 숙박, 식대 등 현재 지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장해 줘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스레 강사섭외와 연결됨
- 예산의 한계 즉 강사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저명인사 또는 수준 높은 전문가 초빙이 어려움.
- 한 예로, “나는 사회적으로 스타강사 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강연비는 받아야 한다.” 실제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 당내 인사 외 외부강사풀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당원 집단지성 내 강사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4. 향후 방향

- 우리는 당내 핵심활동가와 당원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전개해야 함
-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통해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 필요
- 시대와 제도에 맞게 온라인 교육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 현재 우리당의 온라인 교육은 흥미와 몰입도가 낮다라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 강연은 현장의 분위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넘쳐나는 온라인 콘텐츠 시대에 살면서 ‘락(樂)’이 빠져서는 안됨
- 장시간 교육이 아닌 쇼츠(Shorts) 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하여 전파하는 시스템이 필요

오프라인	구분	온라인
선출직공직자, 권리당원, 신입당원	대상	소당원 대상
정치, 인문, 교양, 윤리, 정치관계법 등	주제	민주당의 역사, 당원의 역할, 분야별 주제 등
· 당헌·당규에 입각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 민주당아카데미 ▶ 신입당원 아카데미 ▶ 선출직공직자 대상 교육연수	형식	· 다큐멘터리 형식의 (교육)홍보영상(5~7분) ▶ 민주당의 역사 ▶ 강령 등 · 분야별 주제에 맞는 온라인 영상(5분) ▶ 쇼츠(Shorts) 영상
· 정기적, 규칙적 정당 주최 교육연수사업 (Regular) · 선출직 출마자격 부여(교육이수시간)	목적	· 당 소속감 고취 및 증대 · 신입당원 정체성 확립 · 정치 현안 이슈파이팅

- 실제로 당원교육 사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일방적 소통방식과 토론 없는 강연의 방식을 벗어나야 함
- 서울시당은 2023년 두 차례 진행된 〈香氣 나는 人과의 만남, 서울 민주당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토론시간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노력
- 이를 통해 피교육생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음
- 토론이 생활화되어야 하고, 토론을 통해 학습하고, 정책적 생산까지 이어져야 함
- 당원들 역시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할 줄 알아야 함.
- 우리는 질의응답에 익숙해 져야 하며, 당원주권시대에는 바로 토론모임을 상설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봄
- 당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만큼 당원의 니즈를 반영해야 함
-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소통 없는 교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과의 상시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줄 필요성 제기
- 이와 같이 정당의 당원교육을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형식으로 접목해 볼 필요성도 있음
- 한편 우수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당내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역시 당원의 역량 강화를 하는 한편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5. 결 론

- 우리당은 지난 8월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었음
- 이제 우리당은 당원과의 다양한 소통과 당 정체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연수사업 모델이 제시되어야 함
- 또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내 교육연수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우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지도자를 배출한 역사적인 정당으로 당원주권시대에 맞는 교육연수사업 정비를 통한 당원역량 강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
- 당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그 답이 될 것

〈끝〉